

# 여야, 조국 공방...“국조·지명 철회” vs “제발 이성찾길”

### 조국 전날 법무부 장관 내정 놓고 날선 공방 한국 “文오만·독선, 조국 낙마로 심판받을 것” 민주 “사법개혁, 조 후보자만한 책임자 없어”

여야는 주말인 10일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놓고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 전 수석의 내정을 강력 규탄하며 인사청문회가 아닌 국정조사와 지명철회를 촉구했다. 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주장을 일축하며 조 후보자가 ‘사법개혁 책임자’임을 거듭 강조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죽창가를 외치며 국민 편 가르기에 여념이 없던 조국 교수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에 대한 무한충성 ‘SNS질’로 이제는 법무부 장관 후보까지 되는 서글픈 현실이 개탄스럽다”

고 밝혔다. 이어 “후배이자 제자인 서울대 학생들도 조 교수를 비판하고 있다”며 “그러나 조 교수는 반성이 없다. 오히려 더 두꺼운 얼굴로 자신의 제자이자 후배들을 극우로 몰아세운다. 그 모든 것을 희생할 만큼 권력의 맛을 본 것이냐”고 따졌다. 그는 또 “조 교수는 공직자로서 능력도 최악이라는 것에 이문이 없다”며 “문재인 정권을 무능 인사들로 가득 채워 안보·외교 불안과 경제 위기를 불러온 일등공신이 바로 조국 교수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조 교수가 준비해야 할 것은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국정조사”라며 “조국(祖國)을 위해 조국(曹國)

의 영전은 안 된다는 국민의 외침을 무시한 문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은 조국의 낙마로 심판받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같은 당 민경욱 대변인은 “어제 청와대가 발표한 개각에 국민 모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외무고시 합격 없이도 외교부 장관 되고, 사법고시 통과 못해도 법무부 장관 되는 세상이 됐다”는 세간의 비웃음이 들리는 듯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조국 장관 지명자는 법관 자격 없이도 재판관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하던 사람”이라며 “본인이 대표주자가 될 생각은 아닌지 검은 속내가 보일 정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평등, 공정, 정의의 의미를 되새겨보라”며 “한국당은 법치국가의 토대를 뒤흔드는 측근 인사의 법무부 장관 지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이번 개각은 전반적으로 개혁과 전문성에 바탕을

찍은 것이었다”며 “개혁이 필요한 부분은 개혁적인 인사를,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단행했다”고 말했다. 특히 조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 철학을 정확히 이해하고 똑심있게 이끌어갈 개혁 의지와 본인 스스로가 도덕적으로 깨끗한 지 여부를 같이 본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조 후보자만한 책임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 등에 대해서는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 수석대변인은 “국정조사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지, 뜬금 없이 무슨 국정조사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한국당이 제발 이성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죄 지은 게 없으면 조 후보자가 뭐가 무섭겠느냐”며 “한국당은 죄 지은 게 없다면 당당하게 조 후보자를 받아들이면 되고 인사청문회에서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다. 한국당이 청문회를 버리고 있는 데 대해서는 “지난해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버릴 것처럼 하더니 조 후보자를 불러놓고 변변한 질문조차 하지 못

한 기억이 있다”며 “저희는 야당이 제발 청문회를 잘 준비해주길 기대한다”고 비꼬았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은

## 日 규제에 北 잇단 도발까지...文대통령, 광복절 메시지 고심

### 日 규제 중단 촉구하며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강조할 듯 아베 야스쿠니 참배 등 8·15 전까지 일본 움직임이 변수 잇단 北 미사일 발사로 대북 메시지 놓고도 고심 커져 北 통미봉남 주장...文 “대화 테이블 나와야” 촉구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5일 발표할 광복절 경축사의 메시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고 있는 데다 북한이 연일 미사일 발사로 남북 경색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어 대일·대북 메시지의 방향과 수위 등을 결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번 주말 광복절 경축사 초안을 놓고 참모진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방향을 잡아나가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우선 일본의 수출 규제도 한일 갈등이 악화일로로 걷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어떤 대일 메시지를 내놓게 될 지에 국내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이 지난 7일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우대국)에서 배제하는 법안을 공포하면서 수출 규제 강행 움직임을 이어간 만큼 문 대통령도 이번 조처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일본이 지난 8일 수출규제를 강화한 3개 품목 중 1건의 한국 수출을 허가하는 등 강대강 충돌을 피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청와대는 대일 메시지의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일본에 수출 규제 중단을 촉구하면서 양국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 규제를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언급했고,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서로 돌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인 만큼 대일 메시지는 그런 흐름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광복절 전까지 일본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청와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양국간대처전의 성격을 ‘전략·반복 게임’으로 규정하고 일본의 움직임에 따라 대응 조처의 수위를 조절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상황을 경제학의 게임 이론에 비유하면 전략 게임이자 반복 게임”이라며 “한 가지의 전략을 끝까지 밀고 가는 게 아니라 상대 말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 전략을 변경하는 것이다. 그것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여부가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아베 총리가 종전기념일인 오는 15일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결정할 경우 국내 반일 여론이 고조되면 문 대통령의 대일 메시지도 더 강경해질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로 남북

관계 경색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청와대의 고심을 크게 하고 있는 부분이다. 당초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 관련 메시지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북한이 최근 17일 동안 5차례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발사체를 발사하면서 문 대통령이 남북간 긴장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대북 메시지에 더 적지 않은 비중을 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 이후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면서도 남북 대화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북한은 이날 권정근 외무성 국장 명의의 담화에서 “미국 대통령까지 우리의 상용무기개발시험을 어느 나라나 다 하는 아주 작은 미사일 시험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주권국가로서의 우리의 자위권을 인정했는데, 도대체 남조선 당국이 뭐갈래 우리의 자위적 무력건설사업에 대해 군사적 긴장 격화니, 중단 촉구니 하며 횡설수설하고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또 “앞으로 대화에 관한 좋은 기류가 생겨 우리가 대화에 나간다고 해도 철저히 이러한 대화는 조미(북미) 사이에 열리는 것이지 북남 대

화는 아니라는 것을 똑바로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한미연합훈련의 책임을 우리 측에 돌리면서 ‘통미봉남(通美封南)’ 행보를 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미연합훈련이 11일부터 열흘간 진행되기 때문에 광복절 전까지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는 전날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에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관계 장관들은 이번 북한의 발사가 11일부터 실시할 예정인 한미연합지휘소훈련에 대응한 무력시위로써 자체 개발한 신형 단거리 발사체의 성능 확인 목적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이 군사적 움직임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어떤 제안을 하게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금은 대일·대북 메시지의 수위와 비중을 결정하는 아주 초기단계여서 의미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며 “논의를 거치다 보면 메시지의 내용과 비중이 다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머칠 남은 동안 일본과 북한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알 수 없어 아직 불확실성이 크다”며 “또 우리 국민들이나 국제 사회의 여론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홍준표 “난 탄핵도 반대 ‘비박’으로 부르지 말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나를 비박으로 부르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박근혜를 반대한 사람들을 총칭하여 비박으로 부르지만, 나는 박근혜 정권 때 정권 차원에서 두 번에 걸친 경남지사 경선과 진주의료원 사건 때 그렇게 모질게 나를 핍박하고 낙선 시켜려고 했어도 영남권 신공항 파동 수습 등 박근혜 정권을 지지하고 도왔던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탄핵 대선 때 친박들이 숨죽이고 있을 때도 탄핵도 반대하고 분당도 반대했던 사람”이라며 “탄핵 재판의 부당성도 조목조목 열거 하면서 내 국민 호소까지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수 붕괴 책임을 물어 책임 정치 차원에서 박근혜 전대통령을 출당 시킨 일은 있지만 나를 비박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나는 친박도 비박도 아닌 홍준표로 정치해 온 사람”이라고 전했다.



#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 가짜뉴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